정치 > **통일**

정부,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 20억 원 지원

323차 교추협 개최…각종 협력사업 운영비 의결

(서울=뉴스1) 서재준 기자 | 2022-01-28 15:04 송고

통일부 전경(자료사진) © 뉴스1

정부는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.

통일부는 이날 제32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(교추협)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.

이날 교추협에서는 총 7개 사안이 의결됐다. 대체로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.

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는 34억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10억7600만 원, 센터시설 관리와 운영에 23억3900만 원이 배정됐다.

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는 20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. 견학지원센터 운

영에 8억3600만 원, 지원인력 채용 및 관리에 7억100만 원, 견학 홈페이지 운영 5억1900만 원 등이다.

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에는 남북교류협력 관리 업무에 21억3900만 원, 남북 분야별 개발협력 지원에 15억4000만 원, 남북 군사 당국 간 통신 체계 유지·관리 1억800만 원 등 45억 원이 지원된다.

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는 무상 58억600만 원, 유상 22억600만 원 등 80억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아울러 곧 만기가 도래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운영경비 대출 기간을 각 3년 씩 늘리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. 이는 지난 2004~2006년 운영경비 106억9200만 원(18년->21년), 2007년 운영경비 74억400만 원(15년->18년)이 대상이다.

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비와 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9억1000만 원,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 경비 9억8000만 원 등에 대한 지원 방침도 이날 의결됐다.

통일부는 당국자는 이날 교추협 안건에 대해 "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지원을 위한 것"이라며 "설 명절 전에 각 기관들의 월급 지급 등을 위해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부탁드렸다"라고 말했다.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